

거대한 무임승차 체계인 자본주의와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의 길 〈서평도서 :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낸시 프레이저, 장석준 옮김, 2023[2022], 서해문집〉

남 찬 섭*

인간의 오랜 역사에서 경제영역 혹은 경제논리는 언제나 사회적 영역 혹은 논리에 의해 통제되고 제약되었다. 경제논리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제와 제약은 때로는 도덕의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예외와 일탈이 없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도래 이전까지 대부분의 시대와 대부분의 지역에 공통된 것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오면서 경제논리는 사회적 통제와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경제논리는 그 자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진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자기조절적 시장의 이야기들이 그런 자율성과 독자성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경제논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를 둘러싼 통제와 제약의 태(胎)를 주기적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그럼으로써 그 스스로도 주기적으로 위기에 빠진다. 이는 마치 자기 자신의 꼬리를 먹어치우면서 자멸하는 우로보로스(ouroboros)라는 뱀과 같다(17, 19).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좌파의 길』은 자본주의가 우로보로스라는 뱀처럼 위기를 맞게 되는 과정과 배경을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확장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맑스가 자본주의의 교환의 논리 이면에 감춰진 생산의 영역을 분석하여 착취의 과정을 밝혔다면(31~34) 프레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저는 그 착취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영역 즉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은밀히 숨겨진 비경제적 영역(기둥)을 드러내보이고 있다(37~54).

『좌파의 길』은 서문과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모두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 프레이저는 자본주의를 단순히 경제체제로 협소하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는 그 생산을 위해 인종적 주변부와 사회적 재생산, 비인간 자연, 그리고 정치(공적 권력)(이)라는 네 가지 비경제적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갉아먹으며 그리하여 생산영역과 이들 네 가지 비경제적 영역 간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설정·재설정하는 하나의 ‘제도화된 사회질서’(58)라는 것이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이렇게 제도화된 사회질서로 개념화함으로써 생산의 논리를 특권화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총체성으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프레이저가 제도화된 사회질서로 개념화하는 자본주의의 특징은 그것이 존재하고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바탕이 되는 비경제적 영역들을 스스로 갉아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기적으로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자본주의를 슈트렉(Wolfgang Streeck, 2012)은 자기파괴적 사회구성체(self-destructive social formation)라고 했지만, 프레이저는 식인(食人) 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cannibal’은 ‘식인’으로 번역되었지만 ‘동족포식(同族飽食)’이라 할 수도 있다. 무엇으로 번역되든 이 단어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책을 읽어보면 영어든 그것을 번역한 한국어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잘 표현한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먹어치우는 네 가지 비경제적 영역 - 인종적 주변부, 사회적 재생산, 비인간 자연, 그리고 정치(공적 권력) - 이 사실은 제도화된 사회질서로서의 자본주의 자신인 것이다.

프레이저는 2장에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적 침탈을 통해 어떻게 인종화된 주변부를 수탈(收奪, expropriation)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에서 착취(搾取, exploitation)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들에 대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수탈은 정치적 보호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주변부에 대한 징발과 징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자본이 임금을 대가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착취와 달리 수탈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인간역량과 자연자원을 징발하여 자본의 축적과정에 징용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러한 수탈이 없다면 착취만으로는 자본이 것처럼 커다란 이윤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수탈은 맑스가 생각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원시축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현재진행형이다.

3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적 재생산을 어떻게 먹어치우는지 그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유대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필수재 공급이나 돌봄 제공, 상호작용 등의 활동에 화폐화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마치 무상인 듯 취급하면서도 이에 의존한다. 이런 활동들은 인간을 유지시키고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자체가 유지되고 작동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자본주의는 이들과 경제적 생산을 분리하여 이들을 여성과 결부시키고 평가절하한다. 그리하여 생산과 재생산을 분할(division)하면서 재생산 영역에 의존(dependency)하고 그러면서 재생산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갠아먹어(책임회피, disavowal) 주기적으로 불안정화(destabilization)한다(121)(이 4D의 과정은 다른 비경제적 영역에도 모두 관철된다). 여기에 맑스가 말한 경제적 모순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제 재생산은 너무나 폭식 당하여 자본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인간적 재생산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¹⁾

4장에서는 비인간 자연과 인간영역의 분할과 그에 의한 비인간 자연에 대한 폭식이 그려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의 존재기반인 자연을 생산과 분할하면서도 자연에 의존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생산논리는 자연을 무한한 자기회복이 가능한 존재로 취급하여 그로부터 마음껏 자원을 추출하면서도 그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 그 자신을 가능케 한 생태적 조건을 늘 불안정에 빠뜨린다. 이는 자본주의가 이종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주로 중심부의 백인남성 노동자)와 주변부를 분할하여 주변부를 수탈하면서도 그 피수탈주체에게 어떠한 보호도 비용도 제공하지 않고 또 재생산에 의존하면서도 생산과 재생산을 분할하여 재생산을 평가절하하고 재생산이 치르는 희생에 어떠한 비용도 제공하지 않아 이들을 계속 불안정에 빠뜨리는 것과 유사하다. 자본주의는 노동과도 관계를 맺지만 자연과도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는 식인적이고 추출적이다. 그리하여 자연은 이윤추구를 위해 무상의 자원을 공급하는(수탈당하는) '수도꼭지'이자 생산과정에서 걸러진 잔여물들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하수구'로 전락하였다. 자연은 스스로의 회복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수탈당하여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들 자체가 위기에 빠져있다.

5장에서는 자본주의가 경제와 정치를 분할하여 공적권력이 구축한 인프라와 시장실패보완책들, 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법·제도들, 국제법 체계 등에 의존하면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갠아먹는지를 보여준다. 경제와 정치를 분할한 효과는 경제적인 것이 외양상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 작동되게끔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적통제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경제적인 것에 민주정치가 개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기반으로 어떤 종류의 사회관계를 통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집단적으로 생산한 사회적 잉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래세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

1)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저는 미국에서 최근 전개된 두 양상을 소개한다. 하나는 자녀출산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여성(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값비싼 난자동결 시술의 유행이며 다른 하나는 운전하면서도 모유를搾 수도 있는 값비싼 첨단 유축기의 확산이다(143~144).

인지, 사회적 재생산활동과 생산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등의 사안들을 모두 자본의 시장논리에 맡기게 되었다.²⁾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이러한 사안들의 결정에 관여하려는 민주적인 공적 통제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조직되어야 하고 그것은 정치 즉 공적 권력에 의해 가능한데도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적권력의 개입을 적대시하고 정치의 권위를 갉아먹음으로써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다.

플레이저는 이들 네 가지 비경제적 영역과 경제 간의 분할과 의존, 책임회피, 그리고 불안정화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이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도 각 장에서 보여 주는데 그것은 자본주의를 16~18세기의 중상주의적 자본주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자유주의-식민주의적 자본주의, 20세기 중반의 국가-관리 자본주의, 21세기의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네 단계의 역사적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네 가지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경계 즉 수탈과 착취 간의 경계, 생산과 재생산 간의 경계, 비인간자연과 인간영역 간의 경계, 그리고 정치와 경제 간의 경계는 끊임없이 재설정되어왔다. 거칠게 요약하면,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자유주의-식민주의적 자본주의를 거쳐 국가-관리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는 그 경계가 대체로 중심부(북반구) 국가 대 주변부(남반구) 국가 사이에서 그리고 다수 인구집단 대 소수 인구집단 사이에서 설정되었다면(경제설정의 수단이나 방법은 달라졌다) 오늘날의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 다수와 소수의 구분이 허물어지면서 계급착취에 더하여 수탈과 재생산의 탐식과 자연과 정치의 포식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중심부와 다수의 입장에서 말하면 경계가 중심부 및 다수의 외부에 있던 것이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내부화한 셈인 것이고 이제는 중심부와 다수집단에서조차 자본 이외의 모든 주체는 자본의 탐식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그러한 탐식은 '부채(負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제도화된 사회질서로서의 자본주의는 이처럼 경제와 비경제적 영역 간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그 경계 바깥의 비경제적 영역을 탐식하면서도(그것에 의존하면서도) 그것의 회복이나 보충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에서부터 오늘날의 금융화된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거대한 무임승차 체제인 셈이다.

분할-의존-책임회피-불안정화라는 4D의 논리가 네 가지의 비경제적 영역에서 네 단계의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관철되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플레이저는 여러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이 시장화와 사회보호라는 플라니의 이중운동을 내파하여 시장화와 사회보호에 해방을 더한 삼중운동을 프레임을 제시했지만 이른바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시장화와 해방을 결합시킴으로써 사회보호를 희생시킨 나머지 신자유주의에

2) 이러한 자본주의는 슈트랙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 공급을 그것의 공급 자체가 아니라 이윤의 축적에 일차적 관심이 있는 사적행위자에게 모두 맡겨둔 체제라 할 수 있다.

대한 비판이 고조된 이후에도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사회 보호도 해방도 희생시키지 않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 것(141~147)이 그 한 예이며, 탈성장론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³⁾ 뒤섞어 정치적 명확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생태정치는 완고한 성장의 지상명령을 해체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민주적 숙고와 사회적 계획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212)이 또 다른 예이다. 또한, 로자 룩셈부르크와 안토니오 그람시, 제임스 오코너가 호명되어 논의의 한 축을 구성한 것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프레이저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단히 폭넓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책의 1장에서 자본주의가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장인 6장에서는 ‘사회주의’도 돌아왔다고 말한다(261). 그리고 돌아온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제도화된 사회질서’로 개념화되고 구상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라고 말한다(263, 277). 제도화된 사회질서로서의 사회주의는 먼저 자본주의가 설정한 제도적 경계선들의 재설정을 고민해야 한다(278). 경제라는 우물 안 조짐에만 일면적으로 집중하기 보다는 경제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비경제적 영역들(주변부의 자본화되지 않은 부, 사회적 재생산, 비인간 자연, 공적 권력)과 경제가 맺는 관계를 새롭게 사고하고 상상해야 한다. 하지만 프레이저는 그렇다고 그러한 분할선을 단번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분할을 단번에 폐지하려 한 소비에트의 시도를 재앙적인 것이었다고 규정하는 그녀는 경계선들을 다시 그음으로써 경제적인 것과 관련지은 비경제적인 것들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279). 그리고 프레이저는 자본주의가 영역들 사이에서 설정해놓은 우선순위 즉 축적을 위한 상품생산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사회·정치·생태적 재생산의 지상명령이 앞서도록 전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재설정과 우선순위 재설정 - 이들을 프레이저는 ‘경계투쟁’(boundary struggles)이라고 부른다(21, 57) - 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28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파괴한 재생산의 온갖 조건들을 회복시키는 한편⁴⁾ 앞으로는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소모하는 모든 부를 보충·수선·대체하는 비용을 그때그때 지불하는(pay-as-you-go) 원칙, 정책에서 흔히 부과방식이라고 번역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3) 프레이저에 의하면,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치’이며 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인간 필요의 엄청난 부분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 관계, 활동이다(212).

4)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저는 사회주의가 그간 자본주의가 저질러 놓은 온갖 파괴의 끔찍한 계산서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한다(281).

사회주의에 관한 상상에서 늘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 즉 시장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프레이저는 사회적 잉여의 할당과 기본적 필요(욕구, needs)의 충족에는 시장이 없어야 하지만 이 둘의 중간 영역에는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285~286). 즉 시장이 협동조합, 커먼즈, 자주적 결사체, 자주관리 프로젝트와 공존하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최상층과 기층에는 시장이 없지만 그 중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한다(285)(여기서 최상층은 사회적 잉여의 할당을 의미하며 기층은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의미한다).

프레이저가 『좌파의 길』에서 펼친 논의를 다소 길게 소개했는데 그녀의 논의는 자본주의가 ‘축적’이라는 지상명령을 위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인간들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논의에서 사회정책 혹은 복지국가는 주변부에 대한 수탈과 징발로 비용을 마련한 중심부에서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계급에게 주어진 계급타협의 결과물로 묘사된다.⁵⁾ 하지만 그러한 사회정책 혹은 복지국가마저 오늘날의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는 공격받고 있다.

재생산 역량이 극도로 침식되었고 그러면서 공적 권력에 의한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대안 마련 역량도 극도로 위기에 처한 그리고 스스로 국제정치경제에서 미·일의 주변부임을 자처하면서 내부의 주변부(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이민자, 지방, 여성, 호남 등)를 수탈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안은 무엇이며 사회정책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프레이저가 말하는 21세기의 제도화된 사회질서로서의 사회주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사회적 잉여의 할당이 민주적·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적 욕구(필요)의 충족이 시장원리에 의해 재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은 상당한 울림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간영역에서 협동조합이나 자주관리 등이 시장과 결합하는 다양한 대안에 관한 상상이 필요하다는 프레이저의 제안은 대안사회 그리고 대안적 사회정책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고민과 상상을 자극한다.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AI)이나 그와 연관된 기술변화가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 간의 경계를 어떻게 바꾸고 재설정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좌파의 길』은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의 근본원인에 관한 총체적인 조망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고민과 관련해서도 좋은 안내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⁶⁾ 진보적 사회정책의 모습을 고민하고 진보적 사회의 모습을 고민하는 모

5) 프레이저는 책에서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대신 social welfare, social provision, social suppor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번역본에서는 이들 용어들이 모두 ‘사회복지’로 번역되어 있다.

6) 책의 원제는 “Cannibal Capitalism: How Our System Is Devouring Democracy, Care, and the Planet - and What We Can Do About It”이어서 말하자면 ‘집단-대안’의 순서인데 번역서의 제목은 “좌파의 길: 식인 자본

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 참고문헌 ■

Streeck, W. (2012), "How to study contemporary capitalism,"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53: 1~28.

주의에 반대한다"여서 '대안-진단'의 순서로 된 셈이다. 하지만 어쨌든 진단과 대안이 모두 녹아있는 제목인 것은 공통된다고 하겠다.